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b>배 포 일</b>		2020. 10. 18. / (총 1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강 대 금 이 수 원		044-203-2211 044-203-2212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과 장 담 당 자	김 기 용 이 성 훈		044-201-3526 044-201-35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방역만을 생각하다가 민생경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할인권 지급 등 일부 추경 사업의 집행이 차질을 빚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비할인권은 △국내 방역 상황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재개하는 만큼, 문체부에게 해당 업종·시설에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소통 및 책임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내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계신 만큼 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이 어렵게 의료기관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예방접종 가능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의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10월 4일(일)부터 10월 17일(토)까지 추석 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간(9.20.~10.3.)의 66.5명에 비해 4.7명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20.~10.3.)의 51.8명에 비해 5.2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2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20.~10.3.)의 14.7명에 비해 0.5명 증가하였다.

###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월 20 ~ 10월 3일	10월 4일 ~ 10월 17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6.5명	61.8명
수도권	51.8명	46.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4.5명	15.5명
집단 발생 <sup>1)</sup> (신규 기준)	29건	24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7.4% (197/1134)	16.5% (178/108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sup>2)</sup>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이전 2주간(9.20.~10.3.)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이다.
-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 있다.
  -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생 환자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13. ~ 9.19.	9.20. ~ 9.26.	9.27. ~ 10.3.	10.4. ~ 10.10.	10.11. ~ 10.1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07.4명	75.6명	57.4명	61.4명	62.1명
수도권	83.7명	59.6명	44명	49.3명	44명
비수도권	23.7명	16.0명	13.4명	12.1명	22.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3명	13.4명	15.6명	13명	18명

- 또한,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으나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 서울시는 11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되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10월 19일(월)부터 노인·정신병원(시설) 종사자, 노인주간보호 시설 이용자(708개소 21,84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10월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97개소에 대해 방역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등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道)내 고위험시설 1만 613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 3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
    -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 우선 이용 인원의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등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 10월 22일(목)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천 원까지 40%가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시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할인된다.
      - \* 5개소 :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 \*\* 현장 구매는 10월 27일부터 적용
    - 공연은 10월 22일(목)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천 원이 할인(1인 4매 한도)되며, 10월 24일(토)부터 사용할 수 있다.

- \* 8개소 :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에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 영화는 10월 28일(수)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6천 원이 할인(1인 2매 한도)되며, 10월 30일(금)부터 사용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2~11.30)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한다.
-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하여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소비 할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권을 발급한다.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10월 22일(목)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 분야의 소비 할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4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합동으로 추진 중인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20.7)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10.16 기준, 누적)이다.
- 정부는 해외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5월부터 건설사-병원 협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6.25, 산업부) 이후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었다.

##### <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

- ◇ (대상국가) 총 85개국 대상 \* 재외공관을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국가 지속 확인중
- ◇ (진료절차) 재외국민 신청 → 가능국가 확인 → 온라인 진료 → 국가별 상황에 따라 △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 영문 처방전, △ 현지약 추천
- ◇ (주요사례)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 현지 X-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 X-Ray 결과를 국내의료진과 상담·해결

-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상담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마스크·진단 도구(키트)·의약품 등의 현지통관·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기업들과 안전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 지난 7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에어앰블런스를 통해 확진자(1명) 귀국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단체 귀국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회사 연수 시설 등 별도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 등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기존의 방역 지원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T/F)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58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37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083개소, ▲노래연습장 611개소 등 34개 분야 총 7,21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